

새 정부 소비자안전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목 차

1. 논의의 배경	/ 01
2. 우리나라 소비자안전정책의 추진 연혁	/ 02
3. 새정부의 국정기조와 소비자안전정책 추진 방향	/ 06
4. 소비자안전정책의 최신 의제들	/ 11
5. 새정부 소비자안전정책 추진 방향 제언	/ 19

1. 논의의 배경

- 현재 우리나라의 소비자정책은 제6차('24-26) 소비자정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의 시행 2년차를 맞이하는 동시에 제7차('27-29) 기본계획의 수립 준비가 필요한 시점임
- 동시에 '25년 6월 3일 치뤄진 조기 대선으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게 됨에 따라 새정부 국정 기조에 부합하는 새로운 소비자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짐
-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소비자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범정부 종합 정책계획으로서 소비자안전정책에 요구되는 시대적 과제를 반영하는 동시에 새정부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새로운 소비자정책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본고는 1) 우리나라 소비자안전정책의 지난 과업을 돌아보고, 2)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2025.8.13 발표)와 2) 현재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비자안전정책의 주요 내용, 나아가 3) 국제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최신 소비자안전 정책의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우리 정부가 지향해야할 미래 소비자안전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함
- 과거 우리정부가 추진해온 소비자안전정책의 과업들을 살펴봄에 있어서는 소비자안전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주요 사건들과 그 대응 노력으로 제·개정된 '안전' 관련 주요 법률과 제도들을 분석대상으로 함

- 현재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비자안전 정책의제의 분석은 2025년 현재, 시행 2년차에 접어든 6차('24-26) 기본계획 내 소비자 안전 관련 과제와 6차 기본계획 의결('23년 8월) 이후 관계 부처의 보도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함
-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최신 소비자안전 정책의제의 분석은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와 그 산하기구인 제품안전작업반의 논의 안건들을 분석 대상으로 함

2. 우리나라 소비자안전정책의 추진 연혁

2.1. 소비자안전 관련 주요 사건과 대응

- 소비자안전정책의 미래 방향성 설계를 위한 첫 단계로 본고는 우리나라의 소비자안전정책이 어떠한 행로를 거쳐 현재에 이르렀고, 그 결과 어떠한 시대적 과제에 직면해 있는지 분석하고자 함
- 이 때, 분석대상 시기는 ‘소비자안전’이라는 가치의 중요성이 사회 전반, 정부 부처 전반으로 확산되어 나가던 2000년대 중반 이후를 대상으로 하며, 정부 정책기조에 따른 정책 방향 비교를 위해 역대 정부의 재임 시기별로 그 동향을 비교·분석함 (표 2-1)
-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정책적 대응 요구가 높았던 시기였으며, 그 결과로서 「식품안전기본법」과 「제품안전기본법」 등 안전을 목적으로 제정된 기본법들이 등장하기 시작함

〈표 2-1〉 우리나라의 소비자안전 관련 주요 사건과 법제도적 대응

이 의 분 류 구 분	주요 사건		법제도적 대응	
	연도	사건	연도	대응
식품안전과	2004	불량만두사건	2008	식품안전기본법 시행
	2008	멜라민분유사건	2009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시행
		식품이물질 사고		
		광우병 사태		
	2011	동일본 대지진 (방사능오염식품 우려) 가습기살균제 위험성 최초 인지	2010	제품안전기본법 시행
국민생활안전과			2012	가습기살균제 의약외품 전환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 유독물 지정 생활화학용품 안전관리업무 환경부 이관
			2013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
	2014	세월호 사건	2014	국민안전처 신설
	2015	메르스 발생	2015	어린이제품안전법 시행
	2016	가습기살균제 관련자 구속	2016	환자안전법 시행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 발표 (생활화학제품 관리 체계 개편)
마케팅안전과			2017	가습기살균제특별법 세월호특별법
			2017	제품안전정책협의회 신설 소비자정책위원회 지위 격상
	2018	라돈침대 사건	2018	제조물책임법 개정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도입)
	2019	Covid-19 발생 (백신 안전성 논란)	2019	화학제품안전법 시행
			202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안전정책기획과	2022	이태원 참사		
	2023	오송지하차도사고	2023	재난안전법 일부개정 (지역축제 안전관리 조치 강화)
	2024	제주항공 참사	2025 (4월)	항공안전 혁신방안 발표

- 박근혜 정부 시기에도 안전이 강조되었는데, 이 시기에는 식품의약품 안전청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되고, 국민안전처가 신설되었으며, 「어린이제품안전법」, 「환자안전법」 등 안전을 강조한 법률들이 지속적으로 생겨나는 가운데 가습기 살균제 관련 사건에의 대응과 후속 대응을 위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 등이 발표됨
-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함께 「가습기살균제특별법」, 「세월호특별법」 등을 통해 안전사고 관련 피해자들의 직접적 피해구제를 도모하는 한편, 소비자 정책위원회의 지위 격상 등을 통해 정부 내 소비자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강화하였고, 「제조물책임법」 개정을 통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화학제품안전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과 시행 등을 추진함
- 윤석열 정부 당시에는 이태원 참사, 오송지하차도사고, 제주항공 참사 등 다중밀집지역, 교통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안전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지역축제 안전관리 조치 강화, 항공안전 혁신 방안 발표 등의 후속조치가 이루어짐

2.2. 우리나라 소비자안전정책의 성과와 향후 과제

- 소비자정책이 태동하였던 1960-7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 정부의 상품 규제는 어디까지나 품질관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며, 품질 관리 정책의 결과물로 최소한의 소비자 안전 확보 또한 이루어졌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산업 육성 정책의 부수적 산물에 불과했음 (여정성, 2019)
- 이후 1980년대 「소비자보호법」의 제정과 한국소비자원의 설립을 통해 소비자안전감시와 확산 방지 등의 기능이 마련되었고, 2004년에는 소비자안전센터가 설립되면서 그와 같은 기능이 한층 더 강조됨

- 2000년대 후반, 2010년대에 들어서는 식품과 제품을 시작으로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강조한 법률들이 속속 제정·시행되었고, 가슴기살균제 사태를 비롯한 각종 참사와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전보다 훨씬 많은 부처들이 소비자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음
- 결과적으로 「소비자보호법」의 제정과 소비자권익, 그중에서도 소비자 안전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공감은 산업 육성 정책의 부수적 산물에 불과했던 소비자안전 정책을 다수 부처의 최우선 정책 과제로 부상시켰으나, 동시에 관리 대상 품목과 관계 부처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중복규제와 규제 혼란, 부처 간 경쟁과 회피 매커니즘의 발현 등 정책추진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함께 유발함
- 앞서 살펴본 주요사건들에서도 확인한 바와 같이, 소비자안전문제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신기술·신유형 상품의 등장에 따라 문제의 내용과 양상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며, 때문에 급변하고 있는 현 시점의 시장 환경하에서 소비자안전정책에 대한 수요는 양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확장될 수 밖에 없음. 이 가운데 이미 심화되고 있는 품목별 관리 시스템의 한계, 그로 인한 소비자안전분야 컨트롤타워에 대한 요구 또한 더욱 심화될 수 없음
- 이에 향후 우리 정부는 신기술·신유형 소비자안전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품목별 관리 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는 소비자 안전 정책 추진체계의 재정비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사료됨

3. 새 정부의 국정기조와 소비자안전정책 추진 방향

3.1. 분석개요

- 이재명 정부는 취임 약 70여일 후인 지난 2025년 8월 13일,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함
- 새 정부가 제시한 여러 원칙들 가운데 ‘안전’은 새정부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 중 하나로 대선 공약, 대통령 취임사, 국정과제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강조됨
 - (대선 공약) 15대 정책과제 중 하나로 ‘국민생활안전 및 재난 대응’을 제시하였으며, 추진과제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전기차 화재사고 대응, 개인형 이동 수단 안전, 항공 안전, 데이터 안전 및 AI 안전 확보 등을 제시함
 - (대통령 취임사) 언급된 총 다섯 개의 국정목표 가운데 하나로 ‘안전과 평화’가 제시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태원 참사, 오송지하차도 참사 등 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사회 건설’과 같은 목표들이 제시됨
- 그러나 이와 동시에 새정부가 추구하는 국정목표 가운데에는 ‘규제 합리화’, ‘네거티브 규제’, ‘신산업 육성’ 등 소비자안전과 상충 될 가능성이 있는 또 다른 정책 기조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음
- 이에 본고는 새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보다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국정과제(안)에 포함된 소비자안전 유관 정책을 선별하여 살펴보는 한편, 소비자안전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산업 및 규제 관련 정책 기조들을 함께 분석하고자 함

3.2. 새 정부 국정과제 내 소비자안전정책 유관 내용

- 본고는 새 정부 국정과제 내 소비자안전정책 유관 과제를 선별하기 위해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 안전의 정의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위해와 관련한 정책과제’들을 정리하되, 디지털·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한 새로운 시장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소비자 안전 유관 과제에 ‘디지털 안전’ 관련 과제를 함께 포함시킴
 -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 안전은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의 보호’를 의미함 (소비자기본법 제4조 제1호)
 - 그러나 이는 온라인 시장이 존재하지 않았던 1980년대에 정의된 개념으로서, 오늘날 실제 시장에서 제공되고 있는 다양한 디지털 신기술 제품 및 서비스와 그로 인해 유발되는 소비자 안전에의 위험 요인들을 포괄하지 못함
 - 이에 본고는 디지털 안전, 데이터 안전, 소프트웨어 안전, 알고리즘 안전, AI 안전 등 ‘안전’이라는 가치가 강조되고 있는 디지털·신기술 이슈들 가운데 소비생활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이슈들을 소비자안전정책 유관 과제로 보고 분석 대상에 포함시킴
- 분석 결과, 새 정부 국정과제 내에 포함된 소비자안전정책 관련 과제 들에는 ‘제품안전’, ‘교통안전’, ‘환자안전’, ‘디지털안전’ 과제들이 있었음 (표 3-1)
 - 제품안전과 관련하여서는 화학제품에 대한 온라인 감시 강화와 조기 감지에서 신속 구제로 이어지는 전주기 대응체계 구축 계획이 언급됨
 - 교통안전과 관련하여서는 전기차·이륜차·개인이동수단 등 미래교통수단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 및 항공·철도 안전관리 강화 방안 등이 포함됨

- 환자안전과 관련하여서는 환자 권리 및 안전 보장을 위한 법·제도 인프라 강화 계획이 언급됨
- 디지털안전과 관련하여서는 온라인상 콘텐츠 건전성 제고,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AI 윤리·신뢰 기반 조성 등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계획이 제시됨

〈표 3-1〉 새 정부 국정과제 내 소비자안전정책 유관 내용

구분	추진 내용	관계 부처	국정 과제
제품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제품 사고 예방·대응 - 불법유통 화학물질·제품에 대한 온라인 감시 강화 - 조기 감지-피해조사-신속 구제까지 전주기 대응체계 구축 	환경부	44
교통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안전 대책 강화 - 전기차·이륜차·개인이동수단 안전대책 마련 - 항공 및 철도 안전관리 강화 - 자율주행 법령제정 	행안부	72
환자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 중심 의료개혁 추진 - 환자권리 및 안전 보장을 위한 법·제도 인프라 강화 	복지부	83
디지털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NS 과의존 예방 등 아동·청소년 보호 방안 마련 	방통위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윤리·안전·신뢰 기반 조성 - 딥페이크 탐지, AI 모델의 유해 콘텐츠 생성 사전차단, AI 오남용 대응 핵심 기술 개발 및 상용화 지원 - 피싱, 스미싱 등 디지털 역기능 해소 	과기 정통부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주체 권리 보장 강화 -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잊힐 권리 확대 - 딥페이크 등 합성·변조된 개인정보의 삭제 요구권 도입 	개인 정보위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 온라인상 정보·콘텐츠 건전성 제고 - AI 역기능 대응 위한 이용자 보호 규제체계 정비 및 피해구제 	방통위	108

- 다만, 정부 발표에 따르면, 본고의 분석자료가 된 국정계획(안)(2025. 8. 13. 발표)은 확정안이 아니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 등 소비자안전 관련 주요 부처의 국정과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바, 추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3.3. 새 정부의 소비자안전 관련 산업·규제 정책 기초

- 새 정부의 소비자안전정책 방향을 가늠함에 있어서는 소비자안전정책 추진 방향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산업 및 규제 관련 정책 기초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먼저 국정과제의 전체 체계를 살펴보면, 새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하에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를 제시함
- 이중 소비자안전정책과 관련이 있는 산업 및 규제 관련 정책과제들은 5대 국정목표 가운데 2번째인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와 생명과 안전, 복지를 강조하는 4번째 ‘기본이 튼튼한 사회’하에 다수 포함되어 있었음 (표 3-2)
- 이 가운데 본고는 소비자안전정책 관련 산업 및 규제 정책기조로서
 - ① 디지털·순환경제로의 전환, ② 인구위기극복을 위한 아동, 청년, 고령자 정책 지원 확대, ③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규제 합리화와 ④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방 정부의 역할 강화 등을 도출함 (표 3-3)

〈표 3-2〉 새 정부 국정과제의 전체 체계도와 소비자안전정책 유관 영역

국가비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국정원칙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		
국정목표	1.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2.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3.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4. 기본이 튼튼한 사회	5. 국익중심의 외교안보
국정과제 (123개)	19개 과제	29개 과제	23개 과제	37개 과제	15개 과제
실천과제 (564개)	79개 과제	137개 과제	113개 과제	173개 과제	62개 과제

〈표 3-3〉 새 정부 국정과제 내 소비자안전정책 관련 산업·규제 과제 현황

키워드	관련 국정과제
디지털 혁신경제 전환	21. 세계에서 AI를 가장 잘 쓰는 나라 구현 (과기정통부)
	31. 미래 모빌리티와 K-AI 시티 실현 (국토부)
	32. 의료AI, 제약, 바이오헬스 강국 실현 (복지부)
지속가능 순환경제 전환	39.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산업부)
	41. 탄소중립을 위한 탄소중립 실현 (산업부)
	42.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 (환경부)
인구위기극복	87. 아이키우기 좋은 출산·육아 환경 조성 (여가부)
	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국조실)
	91. 인구가족구조변화 대응 및 은퇴세대 맞춤형 지원 (복지부)
신성장 동력 규제 합리화	19. 민생·안전과 공정·상생을 위한 규제 합리화 (국조실)
	29. 신성장동력 발굴·육성으로 첨단 산업국가 도약 (산업부)
	36. 경제·산업 도약을 위한 신산업 규제 재설계 (국조실)
지역자치분권	52.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치분권 역량 제고 (행안부)

- **(디지털·순환경제로의 전환)** 디지털·순환경제로의 전환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관통하는 전 세계적 이슈인 만큼, 소비자안전정책 분야에서 또한 산업 환경의 거시적 변화와 그로 인해 예상되는 잠재적 소비자안전 이슈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음
- **(아동·청년 고령자 지원)** 인구가족구조변화에 따른 대상 맞춤형 정책 추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취약소비자 관련 대응이 특히 중요한 소비자안전정책 분야에서도 이와 같은 정책 기조와의 지속적 연계가 필요함
- **(규제 합리화·혁신 성장)** 새 정부가 경제·산업 도약을 위한 규제 합리화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안전정책의 방향성을 설계함에 있어서도 규제의 필요성과 방법에 관한 보다 정교한 논의와 접근이 필요함
- **(지방 정부 역할 강화)** 새 정부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자치분권 확대 방향을 제시한 만큼 소비자안전정책 또한 소비자안전감시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지방 정부의 역할 정립과 역량 제고 방안 모색이 필요함

4. 소비자안전정책의 최신 의제들

4.1. 우리 정부의 소비자안전정책 추진 현황

4.1.1. 제6차('24~26)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상의 안전 관련 과제추진 현황

- 2025년 현재,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비자안전정책 현황을 가장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는 시행 2년 차에 접어든 제6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임
- 2023년 8월 제11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통해 의결된 제6차('24-26) 기본계획은 '소비자와 함께하는 안전하고 공정한 디지털·그린경제전환'이라는 비전 아래 안전, 거래, 역량 및 피해구제·정책협력 등 4대 정책

분야에서 총 20개 세부과제를 제시한 바 있음

- 6차 기본계획에 포함된 소비자안전 관련 과제에는 3대 추진 목표 하에 총 7개의 세부추진과제가 포함되었으며, 이중 3개가 6차 기본계획이 중점적으로 추진할 핵심과제로 선정됨 (표 4-1)
- 구체적으로 3대 핵심과제의 내용은 ① 「소비자안전기본법」의 제정, ② 전기차, 사물인터넷(IoT), 디지털 치료기기 등 신제품 안전관리 강화, ③ 온라인 및 해외 유입 위해식품·제품의 신속한 유통 차단 등이었음

〈표 4-1〉 제6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내 소비자안전 관련 과제 체계

구분	추진과제	추진 기관
1.1. 품목별 소비자안전 관리 강화		
[핵심]	1.1.1. 신기술·신유형 소비자 안전관리체계 구축	공정위, 과기부, 국토부, 산업부, 식약처, 공정위(소비자원)
[핵심]	1.1.2. 소비자안전 우려 분야 집중 관리 강화	국토부, 농식품부, 식약처, 해수부
	1.1.3. 소비생활 밀접분야의 지속적 안전 관리	문체부, 산업부, 식약처, 환경부
1.2. 위해감시 및 확산방지 기능 강화		
[핵심]	1.2.1. 온라인상 위해 식품·제품의 신속한 유통 차단	공정위, 산업부, 식약처, 공정위(소비자원)
	1.2.2. 위해 감시 및 확산 방지 체계 고도화	공정위, 공정위(소비자원)
1.3. 안전정보제공, 교육 및 취약계층 보호 강화		
	1.3.1. 안전정보제공 및 교육 강화	산업부, 공정위(소비자원)
	1.3.2. 안전취약계층 보호 강화	복지부, 산업부, 환경부, 행안부, 공정위(소비자원)

* 자료: 제11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관련 보도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3. 8. 18.)

□ 6차 기본계획에서 소비자안전 영역은 중앙 부처 과제 비중이 가장 높은 영역이었으며, 영역 내 예산 과제의 비중 또한 평균을 상회하는 등 6차 기본계획의 질적 성장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함

○ **(중앙부처 과제 비중)** 중앙부처가 수행한 전체 87개의 과제 중 30개 (34.5%)가 소비자안전 관련 과제에 해당함

* 참고: 거래(26.4%), 역량·문화(20.7%), 피해구제 및 정책협력(18.4%)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25. 9. 2.)

○ **(예산과제 비중)** 안전 영역 과제 30개 중 24개(80.0%)가 예산과제로 수행되었으며, 이는 전체 평균 77%를 상회하는 수준이었음

* 참고: 거래(69.6%), 역량·문화(83.3%), 피해구제 및 정책협력(77.0%)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25. 9. 2.)

3.1.2.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소비자안전 관련 최신 논의

□ 한편 2025년 9월 2일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된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는 새 정부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소비자정책 방향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짐

□ 그 중 소비자안전 관련 정책 추진계획으로는 ① 식품, 의약품 및 화학제품 대상의 소비자안전 위협요인 감시 강화, ② 해외직구 소비자 안전문제에의 대응, ③ 소비자안전문제 대응을 위한 범부처 협력 및 플랫폼 역할 제도화 등이 포함되었으며, ④ 「소비자안전기본법」의 제정 계획 또한 함께 명시됨 (표 4-2)

- **(품목별 안전관리)** 식품, 의약품, 제품 등 소비자안전 관련 주요 품목의 안전관리 계획과 함께 안전한 데이터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개인정보 침해 차단 계획이 함께 제시됨
- **(위해 감시·확산 방지)** 해외직구 물품의 위해 감시 및 차단 계획과 함께 해당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C-커머스를 비롯한 온라인플랫폼 사업자, 유관 부처 등과의 다양한 협력 계획이 제시됨
- **(통합정보제공)** 소비자24를 통해 해외직구 안전정보 통합 제공 예정
- **(관련법 제정)**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의 안전관리 의무, 해외 플랫폼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등을 법제화 예정

〈표 4-2〉 제15차(25.9)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된 소비자안전 관련 의제

추진 목표	추진 분야	추진 계획
품목별 안전관리	식품, 의약품 제품	농약 등 잔류 식품 불법 의약품 유해한 화학제품 차단 및 점검
	개인정보	개인정보 침해 차단
위해 감시 확산 방지	해외직구	해외유입 위해물품 감시, 차단
		C-커머스 플랫폼과 ‘자율 제품 안전 협약’ 체결
	거버넌스	소비자안전 문제 대응 위한 플랫폼 역할의 제도화
		위해 감시·차단 위한 범부처 실무협의체 운영
안전 정보제공	위해정보	위해정보 제출기관 확대
	통합정보	해외직구 안전정보 등 소비자24로 통합 제공
관련법 제정	소비자안전기본법	법제정 추진 (플랫폼 안전관리 의무,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부과 등)

* 자료: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관련 보도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5. 9. 2.)

4.1.3. 주요 부처의 소비자안전 관련 최신 정책 추진 현황

- 이하 내용에서는 소비자정책 기본계획과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다루어지지 않았으나 현재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소비자안전 관련 정책들을 보완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관련 부처의 최신 업무계획 자료를 분석함
- (식약처) 2025년 업무계획을 통해 식약처는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식의약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정보제공방식의 다변화를 통한 사회적 약자의 식의약 안전정보 접근 기회를 확대하는 계획을 밝힘
 - (온라인 감시체계 고도화) AI 모니터링 시스템 활용, 해외 쇼핑몰·SNS 개인 간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해외직구 화장품의 기획 점검 등
 - (사회적 이슈 대응)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 숙취해소 식품, 문신용 염료 등의 안전성, 불법유통·판매, 허위·과대광고 등 집중 점검
 - (다소비 식품 관리) 절임배추, 달걀, 생식용 굴·육회, 반조리 식품 등에 대한 집중 안전 관리
 - (정보제공방식 다변화) 푸드 QR 정보제공 식품의 지속 확대, 표준화된 식품정보에 대한 수어 영상 개발·제공, 식생활 교육·안내자료의 다국어 제공 등
- (산업부) 2025년 제품 안전성 조사 계획(2025.1.15. 보도 자료)을 통해 해외직구 제품의 선제적 안전관리, 어린이 제품, 온라인 유통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강화,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의 합동 단속 강화 계획 등을 밝힘

- **(해외직구 감시 강화)** 해외직구 안전성 조사를 '24년 400여개 플랫폼에서 '25년 1,000여개로 확대
- **(위해우려 품목 집중 관리)** 어린이 제품, 고령자 제품, 온라인 유통제품에 대한 감시 강화
- **(지자체 합동 단속)** '24년 9~10월 중 진행했던 지자체 합동 단속을 연중 상시로 확대하고, 합동 단속 지자체 또한 '24년 21개에서 '25년 24개 이상으로 확대
- **(환경부)** 생활화학제품 내 원료의 유해성 정보를 등급화(안심/양호/보통/관심)하여 알기 쉽게 표시하고, 불법제품 차단을 통해 안전 조사 및 온라인 유통 상시 감시도 확대함
- **(국토부)** 핵심 추진과제 첫 번째로 항공, 전기차 배터리, 이륜차 등 모빌리티 및 교통 서비스 안전을 강조함
 - **(항공안전)** '25년 4월 발표한 「항공안전 혁신 방안(국토부 보도자료, 2025. 4.30.)」을 통해 공항 안전성 증대, 조류 충돌예방 대책 추진, 항공사의 정비 역량 강화 및 정비 환경 개선, 국적 항공사의 안전경영 환경 조성, 항공안전 거버넌스 구축 등의 계획을 제시함
 - **(전기차안전)** 전기차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BMS 배터리 진단 서비스 시범 사업, 배터리 안전 인증제, 배터리 이력관리제도 등의 실시 계획을 밝힘
- **(행안부)** 2025년 업무추진계획과 새 정부 국정과제 모두에서 사회재난 컨트롤 타워로서 '국민 안전'을 강조함

- **(과기부)** 2025년 업무 추진계획이 제시한 9개 중점 추진과제중 하나로 ‘국민 안심 디지털 안전 확립’을 제시함
 - **(디지털 안전)** 「디지털안전법」 제정 등을 통한 디지털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책임 명료화
 - **(AI 안전·신뢰)** AI 시대 다양한 쟁점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등 디지털 질서 정립 확대
- **(개인정보위)** 2025년 업무 추진계획의 비전을 ‘안전한 개인정보 신뢰 받는 인공지능 시대’로 천명하는 등 건전한 데이터 환경 조성을 위해 정보주체의 ‘안전’과 ‘신뢰’를 특히 강조함
 - **(행태정보 안전관리)** 온라인 맞춤형 광고 제공 목적의 행태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계획을 밝힘

4.2. 국제사회의 소비자안전 관련 논의 현황

- 다음으로 소비자안전과 관련하여 국제사회가 최근 주목하고 있는 정책의제들을 국내 정책과 연계하기 위해 지난 2024년 10월 열린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제1차 장관회의 선언문 가운데 소비자안전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자 함
 - 2024년 열린 정례회의는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설립된 1969년 이후 개최된 최초의 장관급 회의로서 이 회의에서 발표된 「디지털 및 녹색 전환에서 소비자 보호 및 역량 강화에 관한 선언문」은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향후 소비자 정책이 수행해야 할 주요 과업들을 종합적으로 제시함

- 선언문에 포함된 주요 과업들 중 소비자안전 관련 과제는 크게 ① 디지털 신기술 제품 및 서비스의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한 규제체계 개편 필요성 검토, ② 중고시장 활성화, 수리권 확대 등 자원 순환 과정에서의 잠재적 위험성 고려와 대응, ③ 해외직구 시장의 소비자안전 확보 위한 범국가 차원의 안전감시시스템 구축 등으로 요약됨

〈표 4-3〉 OECD 「디지털·녹색 전환 선언문 (2024)」 상의 소비자안전 관련 과제

[이슈 1] 디지털 경제 전환과 소비자안전	
시장환경변화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몰입형기술(VR, AR)의 대중화
정책수요	신체적 건강 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검토 필요
정책과제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는 소비자 위해요인의 재정의
[이슈 2] 그린 경제 전환과 소비자안전	
시장환경변화	중고시장 확대, 업사이클링 활성화, 리퍼브 제품 증가, 수리권 확대 등
정책수요	중고상품이라도 사용 년한 내에서 안전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필요
정책과제	자원순환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논의와 대응
[이슈 3] 해외직구 확대와 소비자안전	
시장환경변화	온라인 국경간 거래의 폭발적 증가, 해외 리콜 상품의 타국가 재유통 문제 증가
정책수요	국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필요성 확대
정책과제	범국가 소비자안전감시시스템 및 협력적 정책이행체계 마련

- (디지털 안전)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몰입형 기술 등의 대중화로 신기술 제품이 소비자의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는 등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는 소비자 위해요인의 재정의’ 필요성이 제기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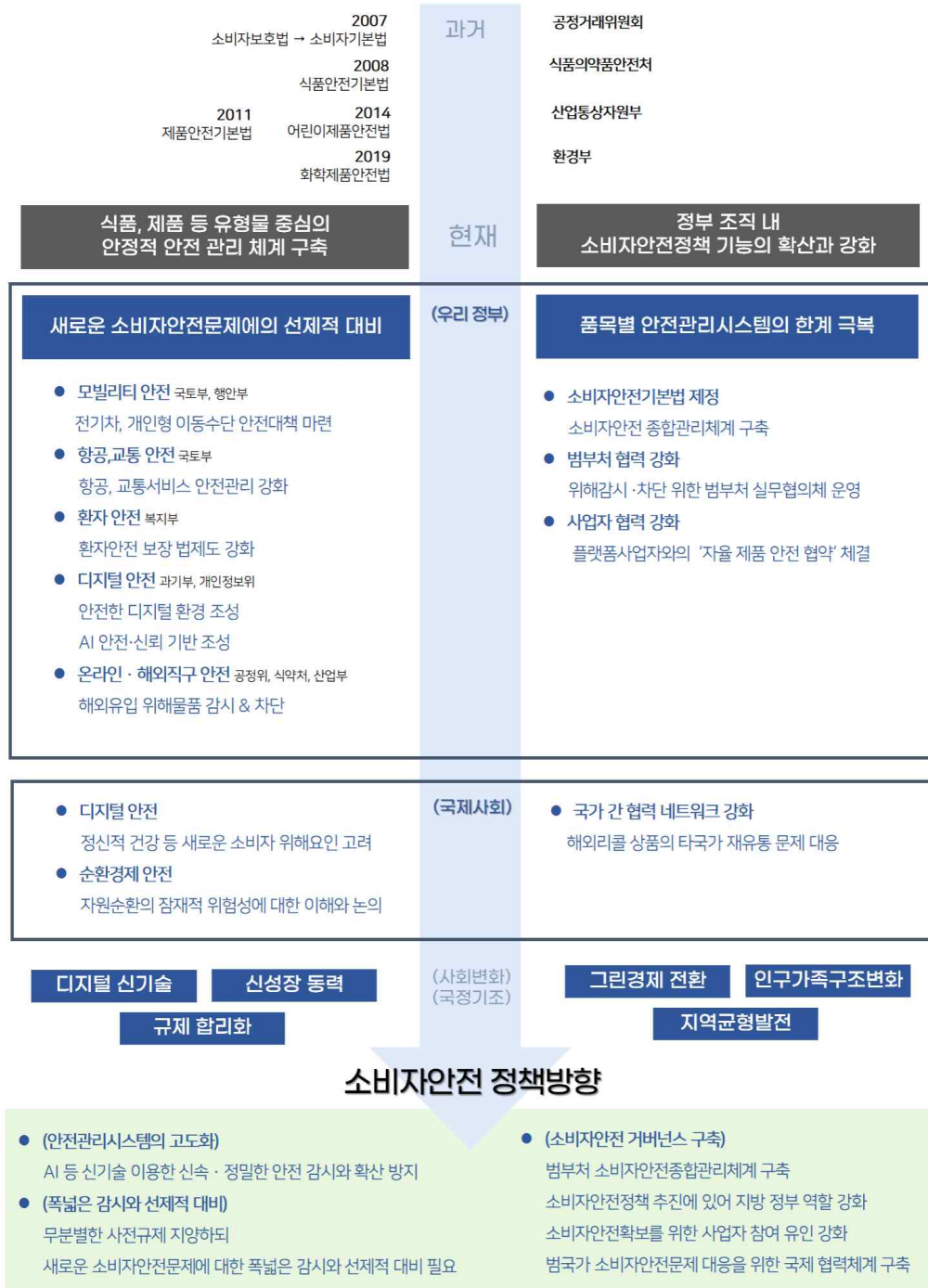
- **(순환경제 안전)** 중고시장 확대, 업사이클링 활성화, 리퍼브 제품 증가, 수리권 확대 등 순환경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내구 년한, 품질보증 기간 등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새로운 문제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됨
- **(국경간 거래 안전)** 온라인을 통한 국경간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해외 리콜 상품이 타국가에서 재유통되는 등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감시와 협력적 대응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됨

5. 새 정부 소비자안전정책 추진 방향 제언

- 새 정부의 소비자안전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지금 이 시기는 우리나라의 소비자정책사에 있어서도, 대외 환경의 거시적 변화 측면에서도 매우 의미가 큰 시점이라고 사료됨
 - 대내적으로는 빠르게 확산·강화되어 온 정부 내 소비자안전정책 기제들이 자칫 중복규제 또는 규제 공백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범부처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대외적으로는 디지털·그린경제 전환으로 대표되는 거시적 시대 변화와 함께 기존의 안전관리체제로 포괄할 수 없는 새로운 소비자안전 문제들이 양적·질적으로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그러나 소비자안전정책에 요구되는 이러한 시대적 과제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디지털 경제 전환을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 자원순환 활성화를 통한 환경친화적 시장 환경 조성 등 소비자안전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또 다른 사회적 가치들에 대한 요구 또한 강하게 받고 있음

- 이러한 배경하에 지난 8월, 새 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소비자안전과 관련된 복수의 정책 추진계획들을 발표한 바 있으나, 이는 확정안이 아니며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비자안전정책 전반을 포괄하고 있지 않은 바, 향후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새 정부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소비자안전정책 방향과 구체적 추진과제에 관한 논의와 발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본고는 소비자안전정책이 직면해 있는 시대적 과제와 대내외적 요구, 국정과제를 통해 확인된 새 정부의 국정기조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그림 5-1>과 같은 정책 추진 방향을 제언하는 바임
- 먼저, 본고가 진단한 소비자안전정책의 성과는 ① 식품, 제품 등 유형물 중심의 안정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② 정부 조직 내 소비자안전정책 기능의 확산과 강화였으며, 추후 보완되어야 할 과제로는 ① 새로운 소비자안전문제에의 선제적 대비, ② 소관 부처 중심의 분절형 안전관리시스템의 한계 극복을 선정함
- 2000년대 후반 이후 우리 정부는 「식품안전기본법(2008)」, 「제품안전기본법(2011)」, 「화학제품안전법(2019)」 등을 연이어 제정·시행함으로써 식품, 제품 등 유형물 대상의 소비자안전관리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켰음
- 그러나 최근 시장에는 신기술 제품이 빠르게 증가하고, 항공, 교통, 의료 등 시설·서비스 안전관리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한편, 디지털·온라인 환경에서의 데이터 안전, AI·안전과 같은 새로운 소비자 안전 이슈에 대한 논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그림 5-1〉 우리나라 소비자안전정책의 시대적 과제와 추진 방향 제언



- 따라서 기존의 소비자안전관리시스템이 포괄할 수 없는 새로운 소비자안전 문제들이 관련법과 책임 기관의 부재로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범부처 차원의 선제적 감시와 협력적이고 유연한 정책 대응이 필요함
- 이와 관련하여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주요 부처가 추진 중인 최신 업무계획에는 모빌리티와 항공·의료 서비스 안전, 디지털 안전과 온라인·해외직구 안전 감시 등 새로운 소비자안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다수의 정책과제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추진체계 측면에서도 「소비자안전기본법」의 제정 범부처 협력 및 사업자와의 협업 활성화 등 중요 과제들이 다수 제시되었음
- 다만 OECD 등 국제기구에서 논의 중이나 국내에서는 관련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소비자안전정책 관련 의제들로 ① 디지털 환경에서의 새로운 소비자 위해요인으로서 정신적 건강에의 영향, ② 자원순환 활성화에 따른 소비자의 잠재적 위험 노출, ③ 위해 물품의 해외 재유통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간 협력 네트워크 강화 등이 있었으므로, 관련 연구 등을 통해 이들 의제에 대한 대응 필요성과 방안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본고는 소비자안전정책의 미래 방향성을 설계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거시적 사회 변화와 새 정부의 국정기조를 대표하는 키워드로 ‘디지털 신기술’, ‘신성장 동력’, ‘규제 합리화’, ‘그린 경제 전환’, ‘인구가족구조변화’, ‘지역균형발전’ 등을 선정함

- 결론적으로 본고는 새 정부가 지향해야 할 소비자안전 정책 목표로
 - 서 ① 안전관리시스템의 고도화, ② 폭넓은 감시와 선제적 대비, ③ 소비자안전 거버넌스 구축 등을 제안함
- (안전관리 시스템의 고도화) 식품 및 제품 안전관리에 있어 우리 정부는
 - 위해정보의 수집과 AI 기반의 조기 감지 시스템 구축, 유통 채널의 특수성 (예-해외 유통망, SNS를 통한 개인 간 거래 등)을 고려한 감시체계 확대, QR 코드, 수어 영상, 다국어 등 안전정보제공 방식의 다각화 등 안전관리 시스템 고유의 기능을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와 같은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 (폭넓은 감시와 선제적 대비) 모빌리티 안전, 항공 및 의료 서비스 안전, 디지털·AI 안전 등 새로운 소비자안전문제가 양적·질적으로 심화되는 가운데, 디지털 신기술 개발을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와 그를 위한 규제 합리화에 대한 요구가 큰 현재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무분별한 사전규제는 지양하되 새로운 소비자안전문제에 대한 폭넓은 감시와 선제적 대비, 민첩한 초기 대응을 통해 새로운 소비자안전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소비자안전 거버넌스 구축) 기존의 시스템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새로운 소비자안전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리 권한을 중심으로 분절된 기존의 소비자안전관리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한 중앙 부처, 지방 정부, 사업자, 유관 국가 등과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특히 중요함
- 새 정부가 소비자안전정책이 직면한 시대적 과제와 디지털·그린 경제 전환이라는 거시적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소비자안전 정책의 성과를 강화하고 한계를 보완하는 한편, 새로운 소비자 위해 요인들로부터 소비자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신기술 시장의 지속적·안정적 성장 또한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임

[참고 목록]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23. 8. 18.) ‘소비자정책위원회, 디지털·그린시대 소비자정책 청사진 발표’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25. 9. 2.) ‘국민주권 정부 소비자정책, ‘소비자주권 확립’-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 발표자료 (2025. 8. 13.)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5. 4. 30). ‘「항공안전 혁신 방안」 발표’
- 법제처 보도자료 (2025. 1. 21.) ‘정부, 올해 국민 안전 보호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법률안 155건 국회에 제출 계획’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25. 1. 15.) ‘해외직구 안전성 조사 확대 등 제품시장 감시 강화’
- 여정성(2019). 소비자정책의 새로운 지평과 과제: 누가, 어디로, 어떻게 갈 것인가?. 소비자문제연구, 50(3), 209-233.
- OECD (2024), Declaration on Protecting and Empowering Consumers in the Digital and Green Transitions, OECD/LEGAL/0504

*본 연구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견해이며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